

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헌법」, <u>국제연합</u>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, 「교육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<u>실현될 수 있도록 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헌법」, <u>UN</u>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, 「교육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<u>실현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1. "학교"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. 2. "학생"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3. "교직원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, 「유아교육법」 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. 4. "보호자"란 친권자·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5. "학생의 인권"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<u>체결·공포한 조약과</u>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<u>누릴 수 있는</u> 모든 권리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1. "학교"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. 2. 현행과 동일 3. "교직원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, 「유아교육법」 20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, <u>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교원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.</u> 4. 현행과 동일 5. "학생의 인권"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<u>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</u>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<u>누려야 하는</u> 모든 권리를 말한다.
제3조(학생의 인권 보장원칙) ① 학생은 인	제3조(<u>학생인권 보장의 원칙</u>) ① 현행과

<p>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<u>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</u>,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.</p> <p>③ 학생의 개성과 <u>자율성</u>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<u>존중되어야 한다</u>.</p> <p>④ <신 설></p>	<p>동일</p> <p>② 학생의 인권은 <u>최대한 보장하며</u>, 이 조례에 <u>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</u>.</p> <p>③ 학생의 개성과 <u>자율은</u> 최대한 <u>존중한다</u>.</p> <p>④ <u>전라북도교육감(이하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밖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</u>.</p>
<p>제4조(책임과 의무) ① 전라북도교육감(이하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<u>하도록 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, 학교의 장,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 등은 <u>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,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</u> 한다.</p> <p>③ 학생은 <u>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,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</u> 한다. <u>학생이 교사,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</u>.</p> <p>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<u>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</u>.</p>	<p>제4조(책임과 의무) ① <u>교육감</u>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<u>하기 위해</u> 노력해야 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, 학교의 장,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 등은 <u>학생이 스스로 인권을 학습하고 보호하며,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</u>.</p> <p>③ 학생은 <u>스스로 인권을 학습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</u>.</p> <p>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<u>위해 노력해야 한다</u>.</p>
<p>제5조(학습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법령과</p>	<p>제5조(학습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법령과</p>

<p><u>학칙</u>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<u>의하지 아니하고는</u>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<u>아니한다</u>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·외 행사 참석을 강요<u>하여서는 아니 된다</u>.</p> <p>③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<u>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④ 교육감파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예·체능 학생,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, 북한 이탈 학생 등의 <u>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</u>.</p> <p>⑤ <신 설></p> <p>⑥ <신 설></p>	<p>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<u>사유가 없는 한</u>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<u>않는다</u>.</p> <p>② <u>교육감파</u>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·외 행사 참석을 강요<u>하지 않는다</u>.</p> <p>③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<u>학습권을 보장해야</u> 한다.</p> <p>④ 교육감파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예·체능 학생,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, 북한 이탈 학생 등의 <u>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</u>.</p> <p>⑤<u>교육감파 학교의 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비대면 학습, 원격수업 등에서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</u>.</p> <p>⑥<u>교육감파 학교의 장은 수업에 필요한 학습 물품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</u>.</p>
<p>제6조(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)</p> <p>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, <u>보충수업</u>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<u>하여서는 아니 되며</u>,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</p>	<p>제6조(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)</p> <p>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, <u>방과후</u>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<u>하는</u>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<u>강요하지 않으며</u>,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</p>

<p>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<u>어서는 아</u> <u>니 된다.</u></p> <p>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<u>지 않는다.</u></p> <p>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 <u>해야 한다.</u></p>
<p>제7조(인권교육을 받을 권리)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<u>타인</u>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그 행사로 <u>인하여</u> 불이익을 <u>받지 아니 한다.</u></p> <p>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<u>접근할</u> 수 있는 곳에 게시 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7조(인권교육을 받을 권리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<u>다른 사람</u>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<u>않는다.</u></p> <p>③ <u>교육감</u>과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과 교직원이 쉽게 <u>볼</u> 수 있는 곳에 게시하<u>고 보호자에게 안내해야</u> 한다.</p>
<p>제8조(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)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,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<u>위하여</u> 적극적으로 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신 설></p> <p>④ <신 설></p>	<p>제8조(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) ① 학생은 <u>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명시한 차별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.</u></p> <p>② <u>교육감,</u>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,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이 <u>제시한</u>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<u>위해</u> 적극적으로 노력 <u>해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학교는 모든 학생, 학급 그리고 동아리에 교육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④ <u>학생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</u></p>

<p>제9조(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) ① 학생은 따돌림, 집단 괴롭힘,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·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<u>학교교육과정에서</u> 차별은 금지된다.</p> <p>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,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<u>취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④ <신 설></p>	<p><u>받지 않는다.</u></p> <p>제9조(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<u>학생에 대한</u> 차별은 금지 <u>한다</u>.</p> <p>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,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<u>취해야 한다</u>.</p> <p>④ <u>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행위나 혐오, 모욕,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</u></p>
<p>제10조(안전에 대한 권리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<u>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</u>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<u>위하여</u>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<u>하여야 한다</u>.</p> <p>③<신 설></p>	<p>제10조(안전에 대한 권리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<u>유지해야 한다</u>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<u>위해</u>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 <u>한다</u>.</p> <p>③ <u>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1조(휴식을 취할 권리)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·발달을 <u>위하여</u>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<u>하여서는 아니 된다</u>.</p>	<p>제11조(휴식을 취할 권리)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·발달을 <u>위해</u>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 <u>하지 않는다</u>.</p>

<p>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④ <신 설></p>	<p>③ 현행과 동일</p> <p>④ <u>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과도한 과제나 수행평가 등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</u></p>
<p>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학생은 복장, 두발의 길이·모양·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교복을 입은 학교의 <u>여</u>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.</p> <p>③ <u>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교복을 입<u>는</u> 학교의 <u>학생</u>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.</p> <p>③ <u>학교는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,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.</u></p>
<p>제13조(사생활의 자유)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·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.</p> <p>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<u>해서는 아니 된다.</u>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<u>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</u>,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<u>지양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<u>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,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<u>금지하여서</u></p>	<p>제13조(사생활의 자유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<u>하지 않는다. 다만</u>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<u>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최소한에 한하여 동성의 교직원이 실시하되</u>,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<u>금지</u>한다.</p> <p>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, <u>휴대전화</u>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<u>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④ 1안)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<u>를 포함한</u>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<u>금지할</u></p>

<p>는 아니 된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.</p> <p>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<u>수 없다.</u></p> <p>④2안)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<u>를 포함한</u>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와 전자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 <u>해야 한다.</u></p>
<p>제14조(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)</p> <p>① 학생은 가족, 교우관계, 성적,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<u>학교의 장은 교육비,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,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<u>본인</u>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</p>	<p>제14조(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)</p> <p>① 학생은 가족, 교우관계, 성적, 징계기록, <u>병력, 상담기록, 성적지향 등</u>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<u>고정형 명찰을</u> 강요 <u>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③ <u>학교의 장은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·처리·관리해야 한다.</u></p> <p>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,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<u>학생</u>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<u>제공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</p>

<p>합부로 <u>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	<p>합부로 <u>누설하지 않는다.</u></p>
<p>제15조(정보에 관한 권리)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<u>본인</u>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<u>학교에 대해</u>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·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<u>하여야</u> 한다.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<u>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,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</u>,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<u>경우</u> 정정 또는 삭제할 권리를 가진다.</p>	<p>제15조(정보에 관한 권리)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<u>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</u> 예·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<u>해야</u> 한다.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<u>해야</u> 한다.</p> <p>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<u>학생에 관한 기록이 부정확하거나,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</u>,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<u>때는</u>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
<p>제16조(양심·종교의 자유)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</p> <p>② <u>학교의 장은</u>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, 서약 등 진술을 강요<u>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③ <u>학교의 장은</u>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<u>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	<p>제16조(<u>양심과 사상·종교의 자유</u>) ① <u>학생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권리를 가지며</u>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</p> <p>② <u>학교의 설립자, 경영자, 학교의 장과 교직원</u>은 학생에게 <u>사상과</u>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, 서약 등 진술을 강요<u>하지 않는다.</u></p> <p>③ <u>학교의 설립자, 경영자, 학교의 장과 교직원</u>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<u>하지 않는다.</u></p>

<p>④ <신 설></p>	<p>④ 학교의 설립자, 경영자, 학교의 장과 교 직원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 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 위를 하지 않는다.</p>
<p>제17조(표현의 자유) ① 학생은 <u>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</u>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 다.</p> <p>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. 단, 학교 의 장은 교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<u>위하여</u>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 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, 장소, 방법에 <u>관 하여</u>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 다.</p> <p>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, 인 터넷<u>홈페이지</u>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하고, <u>필요한 시설과 행·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7조(표현의 자유) ① 학생은 <u>다양한 수 단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</u> 권리를 가진 다.</p> <p>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 <u>으로</u>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. 단, 학교 의 장은 교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<u>위해</u> 이 조례 제19조제3항의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 의 규정으로 그 시간, 장소, 방법 등 <u>을</u>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④ 현행과 동일</p> <p>⑤ 학교의 장은 <u>교지 발간,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 언론 활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게시판 설치 등 홍보 에 필요한 시설과 행·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.</u></p>
<p>제18조(자치활동의 권리) ① 동아리, 학생 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<u>보장된다.</u></p>	<p>제18조(자치활동의 권리) ① <u>학교의 장은</u> 동아리와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 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 <u>을</u></p>

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<u>행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학교는 성적,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<u>하여서는 아니 되며</u>,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 선거<u>에 의해</u> 선출된다.</p> <p>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,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. 학교운영,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.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<p>4. <신 설></p>	<p><u>보장한다.</u>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<u>행·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.</u></p> <p>③ 학교는 성적,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<u>하지 않으며</u>,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 선거<u>로</u> 선출<u>한다.</u></p> <p>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현행과 동일 2. 학교운영,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<u>교무회의,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권리</u> 3. 현행과 동일 <p><u>4. 학생자치조직을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</u></p>
<p>제19조(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)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(이하 ‘학교규정’이라 한다)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<신 설>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·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<u>하여야</u> 하며, 학생</p>	<p>제19조(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) ① <u>학칙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며</u>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(이하 ‘학교규정’이라 한다)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<u>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</u></p> <p>③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·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<u>해야 하며</u>, 학생자</p>

<p>회 등 학생자치<u>기구</u>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·개정하고, 이를 학교 <u>홈페이지</u>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	<p>치<u>조직</u>의 의견 제출권을 <u>보장해야 한다.</u></p> <p>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·개정하고, 이를 학교 <u>누리집</u>에 게시해야 한다.</p>
<p>제20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</p> <p>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<신 설></p> <p>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<u>기구</u>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<u>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</u>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<u>학교운영위원회</u>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20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</p> <p>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<u>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, 성별, 직책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존중한다.</u></p> <p>③ <u>학생자치조직을 포함한</u> 학생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<u>권리에 관한</u>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④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 면담 <u>이나 기타의 방법을</u> 통하여 정기적으로 <u>학생의</u> 의견을 청취하<u>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u></p> <p>⑤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<u>교무회의, 학교운영위원회</u> 등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⑥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학생의 참여를 <u>보장해야 한다.</u></p>
<p>제21조(복지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학습부진, 폭력 피해, 가정 위기, 비행·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,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<u>하여 학교</u>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, 장애, 다문</p>	<p>제21조(복지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학습부진, 폭력 피해, 가정 위기, 비행·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, 진로 모색 등 <u>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등의</u>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, 장애, 다문</p>

<p>화가정 등 경제·사회·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<u>배려</u>하기 <u>위하여</u>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<u>하여야 한다</u>.</p> <p>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<u>조력</u>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·정비<u>하여야 한다</u>.</p> <p>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<u>위하여</u>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<u>하여야</u> 하며,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·<u>운용하</u><u>여야</u> 한다.</p>	<p>화가정 등 경제·사회·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<u>위해</u> 예산 <u>과 인력</u>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<u>배정</u><u>해야 한다</u>.</p> <p>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<u>도</u><u>움</u>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·정비 <u>해야 한다</u>.</p> <p>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<u>위해</u> <u>아동복지</u><u>기관이나</u> <u>인권보호기관과</u> 협조체계를 구축 <u>해야</u> 하며,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·<u>운용해야 한다</u>.</p>
<p>제22조(교육환경에 대한 권리)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, 청결한 환경의 유지,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, 적절한 냉·난방 관리,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신 설></p>	<p>제22조(교육환경에 대한 권리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학교의 장은 <u>학교의 청결한 환경 유지, 충분한 도서실 공간과 장서 확보, 화장실과 탈의실 그리고 휴게 공간 마련,</u> 적절한 냉·난방 관리,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<u>을 조성하기 위해</u> 노력해야 <u>한다</u>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<u>여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</u> 성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p> <p>④ <u>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</u></p>

<p>⑤ <신 설></p> <p>⑥ <신 설></p>	<p><u>한 편의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학생은 학교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,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보장해야 한다.</u></p> <p>⑥ <u>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내에서 유·무선 통신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</u></p>
<p>제23조(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)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<u>위하여</u>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, 공연,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<u>위하여</u>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23조(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) ① <u>현행과 동일</u>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 <u>에 필요한 공간과 행·재정 지원을 해야 하며</u>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, 공연,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·<u>운영해야 한다.</u></p> <p>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<u>위해</u>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<u>한다.</u></p>
<p>제24조(급식에 대한 권리) ① 학생은 안전한 <u>먹을거리에 의한</u>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,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<u>제공</u>하고,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<u>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교육감은 유·초·중·고등학교의 <u>무상</u> 급식</p>	<p>제24조(급식에 대한 권리) ① 학생은 안전한 <u>식수와</u>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,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<u>공개</u>하고,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 <u>하여</u> 그 결과를 <u>급식 운영에</u> 반영해야 <u>한다.</u></p> <p>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<u>위해 노력해야 한다.</u></p> <p>④ 교육감은 유·초·중·고등학교 <u>에 양질의</u></p>

<p>을 실시하기 <u>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신 설></p>	<p>급식을 <u>제공</u>하기 위해 <u>노력해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에 있어서 학생이 신념, 종교, 건강상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</u></p>
<p>제25조(건강에 관한 권리)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,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<u>여</u>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<u>대하여</u>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25조(건강에 관한 권리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여학생 <u>에게</u>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<u>생리용품</u>을 <u>제공하</u>도록 노력해야 한다.</p>
<p>제26조(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)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, 공정한 심의기관의 구성, 소명 기회 보장, 대리인 선임권 보장,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<u>하여야</u> 하며, 이를 위<u>하여</u> 지역사회, 보호자 등과 협력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<u>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</u>,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<u>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	<p>제26조(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<u>해야</u> 하며, 이를 <u>위해</u> 지역사회,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<u>한다.</u></p> <p>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<u>공개하지 않으며</u>,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의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 <u>하지 않아야 한다.</u></p>

<p>제27조(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)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, 그 행사로 <u>인하여</u> 불이익을 받지 <u>아니한다</u>.</p> <p>④ 인권옹호관 <u>및</u>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,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27조(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현행과 동일</p> <p>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,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<u>않는다</u>.</p> <p>④ 인권옹호관,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,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<u>해야</u> 한다.</p>
<p>제28조(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)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28조(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현행과 동일</p>
<p>제29조(홍보) ① <u>교육감은 국제연합의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·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신 설></p>	<p>제29조(홍보) ① <u>교육감은 UN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의 내용과 학생인권을 포함한 이 조례의 내용을 일반인용, 중·고등학생용, 초등학생용, 유치원생용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제작·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.</u></p> <p>② <u>학교의 장은 이 조례 전문을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를 매년 가정통신</u></p>

<p>제30조(학생에 대한 인권교육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<u>하여야</u> 하며, 현장실습,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<u>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<신 설></p> <p>③ <신 설></p> 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<u>문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제30조(학생에 대한 인권교육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<u>해야</u> 하며, 현장실습,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<u>을 포함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의 노동인권교육이란 「헌법」,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따라 학생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교육을 의미하며, 이를 통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함양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.</u></p> <p>④ 학교의 장은 <u>학생의 자율적인</u> 인권 학습과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<u>해야</u> 한다.</p>
<p>제31조(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)</p> <p>① <신 설></p> <p>① <u>학교의 장은</u>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<u>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</u></p>	<p>제31조(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)</p> <p>① <u>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연 2회 이상 이수한다.</u></p> <p>② <u>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소속</u>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<u>한다.</u></p> <p>③ <u>교육감은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와</u></p>

<p><u>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<u>및</u>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<u>자격연수 등에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편성해야 한다.</u></p> <p>④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<u>또는</u>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해야 <u>한다.</u></p>
<p>제32조(보호자의 권리와 교육)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<u>대하여</u>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<u>인권</u>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, 보호자에 대한 <u>인권교육 자료를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</u>(두 개의 항으로 분리)</p>	<p>제32조(보호자의 권리와 교육)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 <u>에게</u>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<u>인권교육 자료를 개발·보급한다.</u></p> <p>③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<u>인권</u>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.</p>
<p>제33조(인권실태 조사)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<u>위하여</u>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33조(인권실태 조사)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<u>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<u>위해</u>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해야 <u>한다.</u></p>
<p>제34조 (인권 모니터링) ① 교육감은 학생의 <u>인권</u>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<u>위하여</u>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<u>대해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34조 (인권 모니터링) ① 교육감은 <u>학생 인권침해</u>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해야 <u>한다.</u></p> <p>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<u>위해</u>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<u>을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제35조(실천계획의 <u>작성</u>)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·복지·휴식 시설을</p>	<p>제35조(<u>인권</u>실천계획의 <u>수립</u>)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·복지·휴식 시</p>

<p>갖추기 <u>위하여</u> 노력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<u>위하여</u>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<u>실천계획</u>을 3년 단위로 <u>수립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공청회, 토론회,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<u>통하여</u> 학생, 교직원, 보호자, 주민의 의견을 수렴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④ <u>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 <개정 2014. 8. 8></p>	<p>설을 갖추기 <u>위해</u> 노력해야 <u>한다.</u></p> <p>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<u>위해 인권</u>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<u>한다.</u></p> <p>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공청회, 토론회,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<u>통해</u> 학생, 교직원, 보호자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<u>한다.</u></p> <p>④ <u>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인권실천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35조의2(학생인권영향평가) ① 교육감은 새로운 정책이나 조례를 입안하기에 앞서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이나 조례에 반영하고 정책 집행 후에는 학생인권영향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교육감이 제정, 입안하려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과 인권우호적인 교육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교육감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</u></p>

	<u>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u>
제36조(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) ①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<u>상황을</u> 조사하고,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<u>하여야 한다.</u>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<u>위하여</u>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<u>하여야 한다.</u>	제36조(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) ① 교육감은 <u>매년</u>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<u>현황</u> 을 조사하고, 그 개선을 위해 <u>행·재정</u> 조치를 취해야 <u>한다.</u>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<u>위해</u>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.
제37조(시민활동 지원)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<u>위하여</u>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,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	제37조(시민활동 지원)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<u>위해</u>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,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제38조(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)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, 장애, 한부모 가정,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, 운동선수, 성 소수자,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·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 <u>하여야 한다.</u>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<u>대하여</u> 교내·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,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<u>제공하는 등의 노력을</u>	제38조(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)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, 장애, 한부모 가정,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, 운동선수, 성 소수자, 학교부적응 학생, <u>북한이탈주민, 난민, 이주민가정</u>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<u>한다.</u>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·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야 <u>한다.</u>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<u>게</u> 교내·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,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 <u>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u>

<p>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 정형편으로 <u>말미암아 수학여행</u> 등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<u>에 대하여</u> 교육활동에서 언어·문화적 차 이 등으로 <u>인한</u> 차별을 받지 <u>아니 하고</u>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<u>하</u> <u>여야</u> 한다.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· 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<u>학생이 경제적인</u> <u>어려움으로 테마식현장체험학습과 같은</u>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 련해야 <u>한다.</u></p> <p>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 <u>이</u> 교육활동에서 언어·문화적 차이 등으로 차별을 받지 <u>않고</u>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대책을 마련해야 <u>한다.</u>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·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<u>해야 한다.</u></p>
<p>제39조(학원, 대안학교, 평생교육 등)</p> <p>① 교육감은 대안교육, 평생교육을 <u>위한 지</u> <u>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 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 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다.</p> <p>③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「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의 학원과 대안학교,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<u>다니는 학생들의 인</u> <u>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</u> <u>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</u> <u>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9조(학원, 대안학교, 평생교육, <u>학교밖</u> <u>청소년</u> 등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, 평생교 육, <u>학교밖 청소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현행과 동일</p> <p>③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「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 호의 학원과 대안학교, 평생학습센터 등<u>에</u> <u>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</u> <u>독한다.</u></p>
<p>제40조(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)</p> <p>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<u>위하여</u>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40조(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)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 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<u>위해</u>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.</p>

<p>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육, 아동복지, 청소년, 의료, 법률,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.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.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<u>대한</u>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<u>자</u> 4.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<p>④ 심의위원회<u>에</u>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<u>에 관하여</u>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.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.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<p><u>4. <신 설></u></p> <p><u>4.</u>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<u>하여</u>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</p> <p>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② 현행과 동일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<u>되, 특 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현행과 동일 2. 현행과 동일 3.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<u>사람</u> 4. 현행과 동일 <p>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<u>을</u>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.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.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<p><u>4. 학생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5.</u>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<u>해</u>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</p> <p>⑥ 현행과 동일</p>
제41조(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)	제41조(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)

<p>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<u>하여</u>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(이하 ‘학생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<u>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한다. 다만,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<u>대해</u>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<u>제출할 수</u>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.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.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<p>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<u>둘 수 있다.</u> <개정 2014. 8. 8></p>	<p>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<u>해</u>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(이하 ‘학생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현행과 동일</p> <p>③ <u>학생위원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다. 다만,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10명 이내의 학생위원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<u>대한 의견을</u>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<u>제출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</u>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현행과 동일 2. 현행과 동일 3. 현행과 동일 4. 현행과 동일 <p>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<u>둔다.</u></p>
<p>제42조(학생인권 교육센터) ① 학생인권교육을 위<u>하여</u>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.</p> <p>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<u>대해서는</u>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2조(학생인권 교육센터) ① 학생인권교육을 위<u>해</u>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.</p> <p>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<u>은</u>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43조(인권옹호관)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<u>및</u> 인권교육을 <u>위하여</u></p>	<p>제43조(인권옹호관)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<u>그리고</u> 인권교육을 <u>위</u></p>

<p>인권옹호관을 둔다. 그 구성 <u>및</u> 권한에 <u>대해서는</u>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,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.</p> <p>③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<u>2년</u>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「대한민국헌법」과 관련 법령, 그리고 <u>국제연합</u>의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해 인권옹호관을 둔다. 그 구성 과 권한 <u>은</u>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현행과 동일</p> <p>③ 현행과 동일</p> <p>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「대한민국헌법」과 관련 법령, 그리고 <u>UN</u>의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<u>한다</u>.</p>
<p>제44조(겸직금지) ① 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, 지방의회 의원, 공무원,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.</p> <p>② 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</p>	<p>제44조(겸직금지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현행과 동일</p>
<p>제45조(인권옹호관의 직무)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.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.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.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·개발 5.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.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	<p>제45조(인권옹호관의 직무) ① 현행과 동일</p>

<p>공표</p> <p>7. 학생 인권교육</p> <p>8.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</p>	
<p>제46조(사무국)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<u>위하여</u> 사무국을 둔다.</p> <p>② 사무국에는 기획·정책의 수립, 인권침해의 조사 <u>및</u> 구제,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.</p> <p>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6조(사무국)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<u>위해</u> 사무국을 둔다.</p> <p>② 사무국에는 기획·정책의 수립,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, 인권교육 등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.</p> <p>③ 현행과 동일</p>
<p>제47조(규정 개정 심의위원회)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·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(이하 ‘규정개정심의위원회’라 한다.)를 <u>두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, 보호자, 학생대표로 구성하며,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</p> <p>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, 절차,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.</p> <p>④ <신설></p>	<p>제47조(규정 개정 심의위원회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현행과 동일</p> <p>③ 현행과 동일</p> <p>④ <u>학교의 장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의 40% 이상으로 구성한다.</u></p>
<p>제48조(교육지원청별 상담실) ①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. <개정 2014. 8. 8></p> <p>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,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</p>	<p>제48조(교육지원청별 상담실) ① 현행과 동일</p> <p>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,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인권</p>

<p>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<u>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옹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해야 <u>한다.</u></p>
<p>제49조(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)</p> <p>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<u>하였거나</u>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<u>대하여</u> 조사한 후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<u>하여야</u> 한다. <개정 2014. 8. 8>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.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.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.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<u>및</u>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<u>아니하다</u>고 인정되는 경우 <p>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,</p>	<p>제49조(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)</p> <p>① ① 학생이 인권을 <u>침해당했거나</u>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<u>비밀을 유지해야 하며</u> 사건<u>을</u> 조사한 후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 <u>해야</u> 한다.</p> <p>③ 현행과 동일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현행과 동일 2. 현행과 동일 3. 현행과 동일 4.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<u>또는</u>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<u>않다</u>고 인정되는 경우 <p>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,</p>

<p>그 요지를 공표<u>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⑤ 인권옹호관<u>으로부터</u>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학교와 교직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<u>하여야</u> 하고,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<u>하여야</u> 한다.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<u>하여야</u> 한다. <개정 2014. 8. 8></p>	<p>그 요지를 공표<u>해야</u> 한다.</p> <p>⑤ 인권옹호관<u>에게</u>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,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<u>해야</u> 하고,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<u>해야</u> 한다.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<u>해야</u> 한다.</p>
<p>제50조(조사)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<u>하여</u>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4.8. 8></p> <p>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 <u>에 대한</u>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,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50조(조사)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<u>해</u>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.</p> <p>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 조사<u>를 위해</u>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,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<u>해야</u> 한다.</p>
<p>제5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<u>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<u>위해</u>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